

<2021 군무원 9급 행정학 (2021.07.24. 시행)>

<단원별 출제 비중>

제1편 행정학총론	6문항	제5편 재무행정론	6문항
제2편 정책론	2문항	제6편 행정환류론	0문항
제3편 조직론	5문항	제7편 지방행정론	3문항
제4편 인사행정론	3문항		

2021 군무원 9급 행정학은 무난하게 출제되었지만 지문이 까다롭게 구성된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번 단체자치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아쉬움이 큼니다. 작년에는 4문제나 정답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출제하여 정답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문이 까다롭게 구성된 문제들도 일종의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비전행정학 기본서와 문제풀이 수업을 충실하게 듣고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점수를 획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행정이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 ②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과 협치를 지향한다.
- ③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 ④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행태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③ [X]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인간의 행동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2021 비전행정학 p.113

2.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제는 계층제 구조를 본질로 하고 있다.
- ② 관료제를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조직모형으로 보고 있다.
- ③ 신행정학에서는 탈(脫)관료제 모형으로서 수평적이고 임시적인 조직모형을 제안한다.
- ④ 행정조직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의 관점에서 관료제 모형을 제시했다.

정답> ④

해설> ④ [X] 베버(M. Weber)의 관료제는 고도의 사유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이념형이다. 현존하는 관료제의 속성을 평균화해서 정립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의 가장 특징적인 것만 추출해서 정립한 가설적 모형이다.

M. Weber의 관료제 이론의 특징
(1) 의 의 ① 베버(M. Weber)의 ‘관료제(1901)’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당시 정치·경제적 현실을 토대로 유럽(프러시아) 관료제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연구된 가설적인 모형이다. ② 실존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조직과 다르며, 영미의 민주당이나 신생국 관료제를 대상으로 연구된 것도 아니다. (2) 특 징 ① 이념형(Ideal type) : 경험에 의한 모형이 아니라 고도의 사유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이념형이다. 현존하는 관료제의 속성을 평균화해서 정립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의 가장 특징적인 것만 추출해서 정립한 가설적 모형이다. ② 보편성 : 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학교·정당·기업 등 대규모 조직이면 관료제 구조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동·서양 공통 ×). ③ 합리성 : 관료제구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이고 최고도로 활용하도록 편제되어 있으며 계층제에 의한 능률성과 법 앞의 평등에 의한 합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조직이라고 본다. 역기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베버(Weber)는 서양사회가 동양사회보다 빨리 발전한 이유가 근대관료제에 있다고 본다.

▶ 2021 비전행정학 p.532

3.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재화의 감가상각 가치를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부채규모와 총자산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다. 현금이 거래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라. 복식부기 기장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① 가, 라
 ② 나, 라
 ③ 나, 다
 ④ 가, 다

정답> ①

해설>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① [O] 가, 라는 옳은 내용이고, 나, 다는 옳지 못한 내용이다.

나. [X] 발생주의는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성과 측정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제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준다.

다. [X]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한다. 현금이 거래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은 현금주의이다.

▶ 2021 비전행정학 p.1025

4.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과 경영은 어느 정도 관료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② 행정과 경영은 관리기술이 유사하다.
- ③ 행정과 경영은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 ④ 행정과 경영은 비슷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

정답> ④

해설> ④ [X] 행정이 경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 행정은 공공성 때문에 그 행위와 책임이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경영은 운영상의 재량성과 자율성이 높다.

▶ 2021 비전행정학 p.21

5.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이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정치체제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②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며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④

해설> ④ [X] 반대로 되어 있다.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2021 비전행정학 p.175

6. 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는 전통적이고 관료적인 관리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진행된 개혁 프로그램이다.
- ②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크기와 관계없이 시장 지향적인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개혁 방안에 관심을 갖는다.
- ③ 시장성 테스트, 경쟁의 도입, 민영화나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정부개혁 아이디어가 적용된다.
- ④ 신공공관리 옹호론자들은 기존 관료제 중심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②

해설> ② [X] 신공공관리론(NPM)은 '1980년대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해 전통적 관료제의 한계(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개혁론'을 의미한다.

▶ 2021 비전행정학 p.123

7.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는 미충족시 불만이 제기 되는 요인(불만요인)의 충족과 함께 적극

적으로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동기요인)이 동시에 충족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 학자로 옳은 것은?

- ① F. Herzberg
- ② C. Argyris
- ③ A. H. Maslow
- ④ V. H. Vroom

정답> ①

해설> ① [O] 설문은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동기·위생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동기유발과 관련된 요인에는 불만요인과 만족요인이 있는데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라는 입장으로 인간은 이원적 욕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욕구는 불만과 만족의 감정에 대하여 별개의 차원에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위생요인은 우선적으로 불만족 제거에 기여하고, 동기요인은 불만요인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 하에서 내재적 보상(성취감, 책임, 승진 등)으로 직무 그 자체에 만족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2021 비전행정학 p.472

8. 행정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학적 방법은 동작연구, 시간연구 등에서 같이 행정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내 보편타당한 법칙성을 도출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 ②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변수 중에서 특히 환경변화와 사람의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 ③ 역사적 접근방법과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은 제도와 구조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시스템적 방법의 장점은 시스템을 이루는 부분들 각각의 기능과 부분간 유기적 상호 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X]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여 행정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이론’을 말한다.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환경과 같은 외부문제에 치중함으로써 사람의 행태와 같은 내부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 2021 비전행정학 p.74

9.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은 행정학의 발달과정에 있어 통치기능설과 관계가 있다.
- ② 정책은 공정성과 가치중립성(value-free)을 지향한다.
- ③ 정책은 행정국가화 경향의 산물이다.
- ④ 정책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X] 정책은 가치평가적이며 가치지향적이다.

▶ 2021 비전행정학 p.260

10.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식백지신탁
- ②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③ 선물신고
- ④ 상벌사항 공개

정답> ④

해설> ④ [X] 상벌사항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윤리(공무원윤리)의 법적 규정>

자율규제윤리		공무원헌장
법 령 적 · 강 제 적 규 제 윤 리	헌 법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 · 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2009.1)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①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 • 재산등록의무 :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기업 등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은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 • 재산공개 의무 : 1급 이상, 정무직, 공기업의 장 · 부기관장, 감사 등은 이를 공개해야 함. ② 선물수령의 신고 및 국고귀속 ③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정한 기관(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됨. ⑥ 주식백지신탁의무 : 재산공개대상자와 기재부 · 금융위 소속공직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내부고발자보호제도)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②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함. ②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 위반행위 신고의무

▶ 2021 비전행정학 p.862

11. 정책결정의 장에 대한 이론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원주의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정책결정의 장을 주도하고 이들이 정치적 조정과 타협을 거쳐 도달한 합의가 정책이 된다고 본다.
- ② 엘리트주의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지배된다고 본다.
- ③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보다 중시하는 이론이 조합주의이다.
- ④ 철의 삼각(iron triangle) 논의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그리고 이익집단의 3자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우호적인 연합을 형성하면서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③ [X] 조합주의체계 하에서 국가나 정부는 자체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된다.

조합주의의 특징
조합주의(corporatism)는 ‘각각의 이익집단들이 단독적·위계적 대표체계를 전국규모로 형성하고, 한편에서는 국가이익을 대변하면서 다른 면에서는 국가이익을 대변한 대가로 해당 범주 내에서 이익대표체계의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체계 방식’을 말한다. (1) 협력적 · 위계적 이익집단 조합주의체계 하에서 이익집단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를 가지고 단일적·협력적·비경쟁적·위계적(계층적)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다. (2) 국가의 독립성 · 자율성 조합주의체계 하에서 국가나 정부는 자체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된다. (3)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는 합의가 형성되며, 이러한 합의는 공식화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행정부가 이익집단의 주된 협의대상이며 주된 활동방식은 제도적 참여이다.

(4) 사회적 가치의 중시

조합주의체제 하에서는 이익집단구성원의 이익과 함께 사회적 책임·합의·조화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이익집단의 결성은 구성원의 이익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5) 편익교환의 관계

국가와 독점적 대표권을 부여받은 이익집단 사이에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적인 관계, 즉 상호 간의 편익의 교환관계가 성립된다. 자원배분은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거래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양자는 대개 보호자와 고객의 관계를 띠는 경우가 많다.

▶ 2021 비전행정학 p.289

12.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십에 있어 자질론적 접근은 리더가 만들어지기보다는 특별한 역량을 타고나는 것임을 강조한다 .
- ② 민주형 리더십은 권위와 최종책임을 위임하며 부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쌍방향 의사전달의 특징을 지닌다.
- ③ 리더십에 있어 경로-목표모형은 리더의 행태가 어떻게 조직원으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시키도록 하는 리더십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준다.
- ④ 상황론적 관점에서 보면 부하의 지식이 부족하고 공식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업 환경에서는 지원적 리더십보다 지시적 리더십이 보다 부하의 만족을 높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X] 권위와 최종책임을 위임하는 것은 '방임형'에 해당한다.

<아이오와(Iowa) 대학의 리더십 연구>

권위형	① 리더가 주요한 결정을 내리고 부하에게 명령·지시하는 유형으로 직무수행에 중점을 두는 과업지향형의 리더십이다. ② 권위형 리더는 모든 방침과 작업과제를 결정하며, 추종자들의 개인적 실책에 대해 직접 비판하고, 과업성취에 주된 관심을 가진다.
민주형	① 부하의 능력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부하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요한 정책이나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형이다. ②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는 유형으로 부하가 조직목표와 당면한 문제를 보다 많이 알게 되므로 창의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민주형 리더는 의사결정권을 추종자들과 나누어 가지며 과업배정을 추종자집단이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방임형	① 리더가 결정권을 부하에게 대폭 위임하여 부하가 업무수행의 목표까지 설정하는 유형이다. ② 방임형 리더는 추종자 개개인 또는 추종자집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정보제공이나 집단활동에 대한 참여는 요청받았을 때에만 한다. ③ 부하의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경우에 효과적이다.

<리더십이론의 변천>

자질론 (속성론)	1940~1950년대	· 리더십의 본질을 리더의 자질이나 속성(Traits)으로 이해 · 전통적인 연구(리더의 자질, 속성 규명)
행동유형론 (행태론적 접근)	1950~1960년대	· 리더의 행동유형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이론(리더행동의 다양성과 차별성 규명) · 아이오와 대학(Lippitt & White)의 연구, 미시간 대학의 연구,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 Blake & Mouton의 연구(관리망이론) 등
상황론적 리더십	1970년대~	· 조직의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은 달라진다는 이론, 리더십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조건 규명(자질론과 상황론을 종합한 상호작용론도 넓게 보면 여기에 속함, 3차원이론도 이에 포함) · Fiedler의 상황적응론, Reddin의 3차원 모형(효과성 리더십 이론),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Hersey & Blanchard의 3차원 모형(생애주기이론) 등
도덕적 리더십 (신자질론)	1980년대~	· 리더의 도덕성이나 카리스마 등 리더의 자질이 다시 리더십의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는 현대적 리더십연구 · '80년대 이후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등

▶ 2021 비전행정학 p.604

13. 조직형태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습조직은 시스템적 사고에 의한 유기적, 체제적 조직관을 바탕으로 한다.
- ②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과 공급, 유통 등을 서로 다양한 조직에서 따로 수행한다.
- ③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계층구조를 결합시킨 이원적 형태이다.
- ④ 가상조직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잠정적이고 임시적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X]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조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이다.

▶ 2021 비전행정학 p.527

14. 참여적(민주적) 관리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ZBB(영기준예산)
- ② MBO(목표에 의한 관리)
- ③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④ PPBS(계획예산)

정답> ④

해설> ④ [X] 계획예산제도(PPBS)는 분석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조직의 상위층에 집중되고, 목표중심의 운영과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의 권한을 강화시킨 나머지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해진다.

▶ 2021 비전행정학 p.960

15.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 ② 직위분류제는 사람이 맡아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 ③ 직위분류제는 전체 조직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업화하고 한 사람의 적정 업무량을 조직상 위계에서 고려하는 구조중심의 접근이다.
- ④ '동일업무에 대한 동일보수'라는 보수의 형평성 요구가 직위분류제의 출발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X] 직위분류제는 객관적인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 체계이다.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계급구조라면, 직위분류제는 사람이 많아서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한 직위구조이다.

▶ 2021 비전행정학 p.741

16.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충원의 개방성을 확대하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다.
-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인적자원의 탄력적 활용이 용이하다.
- ③ 업관주의는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 ④ 대표관료제는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공직충원의 개방성을 확대하면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재직자의 승진기회를 제약하여 사기저하의 우려가 있고, 장기근속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개방형 인사제도의 장 · 단점>

장 점	단 점
① 우수한 외부인재의 등용이 가능 : 임용의 융통성으로 우수한 인재등용이 가능(→ 행정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업무수행의 전문화 · 생산성 ↑) ② 성과관리의 촉진 : 공직의 개방화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에 기여 ③ 공직의 침체 방지 : 문호개방으로 관료주의화와 공직의 침체화 방지 ④ 경쟁의 유도 : 좁은 승진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재직자의 자기개발노력 촉진 ⑤ 신진대사의 촉진 : 신진대사의 촉진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이나 신기풍 주입 가능 ⑥ 시간과 비용의 절감 :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가능 ⑦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 : 인사권자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어 정치적 · 관리적 리더십의 강화로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 데 기여 ⑧ 기 타 :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① 재직자의 사기 저하 : 재직자의 승진기회 제약으로 사기저하의 우려 ② 장기근속 곤란 : 신분보장이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 ③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저해 : 신분의 불안정으로 이직률이 증가 ④ 관료의 비능률화 : 민간전문가의 조직장악이 곤란하고 충성심의 저하를 가져와 비능률을 초래 ⑤ 임용구조의 복잡성 · 비용 증가 : 개방화의 촉진은 임용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임용비용을 증대시킴(내부로부터의 임용보다 신규임용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신규채용에서는 실책을 저지를 위험도 큼) ⑥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곤란 : 정실개입의 여지(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 ×) ⑦ 공직사회의 일체감 저해(이원화의 폐단) : 개방직과 비개방직을 구별하여 양자의 인사원칙을 달리할 경우(→ 개방직 임용자들은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재직자들은 개방직 임용자들에게 거부감을

▶ 2021 비전행정학 p.749

17. 예산과정 중에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예산심의
- ② 예산집행
- ③ 회계검사
- ④ 예비타당성조사

정답> ①

해설> ① [O] 예산심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 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적 재정통제수단(재정민주주의)이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확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부의 예산 심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로서 왕권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통제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부의 예산심의 기능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2021 비전행정학 p.996

18.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 비용과 업무량의 파악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 ②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석의 초점은 지출대상이며 이를 통해 통제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 ③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 ④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와 예산의 연결을 통해 투명성과 대응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O]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을 지출대상(품목)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한 통제를 기하기 위한 통제지향의 예산제도이다.

- ① [X]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 비용과 업무량의 파악을 통해 '능률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 ③ [X] 산출물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능률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 ④ [X]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와 예산의 연결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주요 예산제도의 비교>

비교기준	품목별예산 (1920 ~ 1930)	성과주의예산 (1950)	계획예산 (1960)
① 예산의 기능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
② 정보의 초점	품목(투입)	기능 · 활동 · 사업(산출)	목표 · 정책(효과)
③ 예산의 이념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④ 예산의 중심단계	집행단계	편성단계	편성전의 계획단계
⑤ 예산기관의 역할	통제 · 감시	능률향상	정책에의 관심

⑥ 결정의 흐름	상향적(위로 통제)	상향적(위로 통제)	하향적
⑦ 결정의 유형	점증모형	점증모형	합리모형
⑧ 관리책임	분 산	중 앙	감독 책임자
⑨ 기획의 책임	분 산	분 산	중 앙
⑩ 결정권의 소재	분권화	분권화	집권화
⑪ 예산과 조직의 관계	직 접	직 접	간접(환산 필요)

▶ 2021 비전행정학 p.950

19.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민주화 진작
- ② 지역 간 격차 완화
- ③ 행정의 대응성 강화
- ④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정답> ②

해설> ② [X] 지역 간 격차 완화는 중앙집권의 장점이다. 중앙집권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 경제발전의 정도나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경우 중앙정부의 조정에 따른 균형발전을 통해 그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 2021 비전행정학 p.1110

20.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자치권에 대한 인식은 전래권으로 본다.
나. 권한부여 방식은 포괄적 위임주의이다.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기능적 협력관계이다.
라.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라
- ③ 나, 다, 라
- ④ 가, 나, 다, 라

정답> ④

해설> 정답 없음. (가, 나, 라는 옳은 내용이고, 다는 옳지 못한 내용이다.)

다. [X]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가 국가권력으로 자치단체를 지휘·감독·통제하는 권력적 감독 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비해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기능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구 분	주민자치 ¹⁾	단체자치 ²⁾
① 자치의 성격	정치적 의미 (민주주의의 원리)	법률적 의미(법인격 인정) (지방분권의 원리)
② 성립국가	영미계통(영국·미국)	대륙계통(독일·프랑스·일본)
③ 자치권의 인식	자연적·천부적 권리(고유권설)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전래권설)

④ 자치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주민에 의한 행정)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⑤ 사무의 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없음 (위임사무 부존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위임사무의 존재)
⑥ 권한부여방식	개별적 수권(지정)주의	포괄적 수권(예시)주의
⑦ 중앙통제	약함(입법적·사법적 통제 위주)	엄함(행정적 통제)
⑧ 조세제도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⑨ 민주주의와의 관계	상관관계 인정	상관관계 부정
⑩ 지방정부형태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형)	기관대립형(대통령제형)
⑪ 자치단체의 지위	순수한 자치단체	이중적 지위(자치단체 + 일선기관)
⑫ 통 제	주민통제(아래로부터의 통제)	중앙통제(위로부터의 통제)
⑬ 범 위	광범위함.	협소함.
⑭ 중앙과 지방의 관계	수평적·기능적 협력관계	수직적·권력적 감독관계
⑮ 위법행위통제	사법재판소	행정재판소

1) 주민자치에서의 주요 관심사항은 ① 지역주민과의 관계, ② 지방선거, ③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 ④ 주민참여(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⑤ 자치계층제, ⑥ 민주주의 등이다.

2) 단체자치에서의 주요 관심사항은 ① 중앙-지방의 관계, ② 지방분권, ③ 자치권, ④ 법인격 등이다.

▶ 2021 비전행정학 p.1134

21. 다음 중 예산과 관련된 이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욕구체계이론
- ② 다중합리성 모형
- ③ 단절균형이론
- ④ 점증주의

정답> ①

해설> ① [X] 욕구체계이론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으로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

② [O] 다중합리성 모형은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가 제시한 것으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예산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예산결정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행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Rubin의 실시간 예산결정모형을 통합한 모형이다.

③④ [O] 단절균형모형은 예산 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한 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이론이다(Baumgartner & Jones).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이 전년 대비 일정 정도의 변화에 그친다는 점증주의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021 비전행정학 p.944

22. 지방재정 지표 중 총세입(總歲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 ① 재정자립도
- ② 재정탄력도
- ③ 재정자주도

④ 재정력지수

정답> ③

해설> ③ [O] 설문은 재정자주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기초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까지 포함)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자주재원이 점하는 비율, 즉 총재원(자주재원 + 의존재원)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스스로(자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낸다.

<주요 지방재정지표>

재정규모 (재정력)	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기초적인 정보자료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	(지방세 + 세외수입)/ 일반회계 총세입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 치요건	자립도가 높다고 하여 재정이 건전하다 할 수 없다. (재정규모, 세출의 질, 실질적 재정상태, 정부지원 규모내역 등을 알 수 없기 때문)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 재정수요액	보통교부세 교부여부 판단 기준	지수가 클수록 재정력이 좋다.
재정자주도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 부금)/일반회계 총세 입	보조율 적용 기준	일반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 2021 비전행정학 p.1205

23. 조직이론과 인간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이론의 시작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00년대 초까지 효율성과 구조중심의 사상을 담고 있었다.
- ② 기계적 조직으로서의 관료제는 합리적 경제인의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는데 테일러의 차등성과급제가 이러한 인간관에 기초한 보상 시스템이다.
- ③ 계층구조는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가지며 명령과 통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되는 특성을 가진다.
- ④ 관료제하에서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이나 충동을 멀리하는 정의적 행동(personal conduct)이 기대된다.

정답> ④

해설> ④ [X] 관료제하에서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이나 충동을 멀리하는 비정의적 행동(impersonal conduct)이 기대된다. 관료들은 공식적 업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나 기호의 영향을 받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정의성(非情誼性) · 몰주관성(沒主觀性)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다.

근대관료제의 특징(M. Weber)
(1) 권한의 명확성과 법규에 의한 지배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고, 조직의 기능은 법규 또는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 규칙에 의한 규제는 조직에 가장 중요한 계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2) 분업의 원리

관료제는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일정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고, 강제의 수단이 명확하게 규정되며, 이러한 수단의 이용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

(3) 고도의 계층제(Hierarchy)

모든 직위는 피라미드식의 계층 내에 배치되며 상하위 계층은 질서정연한 명령복종체계를 이룬다. 이는 엄격한 수직적 업무배분을 의미한다. 계층제에서 근무하는 관료는 국민이 아니라 상급자에게 책임을 진다.

(4) 공·사(公·私)의 구별

관청과 사택을 근본적으로 분리하여 공·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이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가산관료제와는 다른 것이다.

(5) 문서주의

모든 직위의 업무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문서로 이루어지고 문서로 보관된다. 이러한 문서화는 객관성·정확성·책임성을 명확하게 한다.

(6) 전문적 자격

관료제의 구성원에게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전문가주의). 전문적 직무활동을 강조한다.

(7) 직업의 전업화·전임직

직무상의 활동은 관료의 전노동력을 요구하여 겸직이 금지된다. 이러한 전임화(傳任化)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8) 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관료제에서의 고용관계는 쌍방의 자유계약에 의한다.

(9) 비개인성(Impersonalism, Sine ira et studio, 물인간성, 비정의성, 물인격적 초연성)

관료들은 공식적 업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나 기호의 영향을 받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정의성(非情誼性)·물주관성(沒主觀性)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다. 관료는 감정과 편견없는(Sine ira et studio, 분노나 열정 없이) 비정의적인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비개인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것이 요구된다.

▶ 2021 비전행정학 p.533

24.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법론적 집단주의를 지향한다.
- ② 정치·행정현상을 경제학적 논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③ 개인 선호를 중시하여 공공서비스 관할권을 중첩시킬 수도 있다.
- ④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 theorem)도 공공 선택론의 일종이다.

정답> ①

해설>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비시장적(정치적·행정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

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D. C. Mueller)를 말한다. 뷰캐넌(J. Buchanan)이 창시하고 오스트롬(V. Ostrom)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중시한다.

① [X]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지향한다. 개인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파악하여 정당이나 국가, 사회 전체적인 선호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유기체적(전체주의적) 접근법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나 행동을 분석하여 정치·경제·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며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 2021 비전행정학 p.103

25.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예산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부처 예산사정을 담당한다.
- ②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작성을 준비한다.
- ③ 기획재정부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따라 각 부처의 세부사업에 대한 심사보다 부처예산 요구총액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 ④ 기획재정부는 조정된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답> ③

해설> ③ [X]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각 부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의 예산사정 작업은 과거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이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정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예산안 편성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 국회에 (정부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¹⁾
국회의 예산 심의 완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동일한 시한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의 기대효과와 한계
1. 기대효과 (1)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전략적 자원배분과 각 부처의 자율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조정기능과 투명성 제고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통하여 함께 결정하므로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되고 예산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3) 비효율적 관행 개선

부처별 과다요구와 예산기관의 대폭삭감에서 벗어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4)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용을 통하여 경기대응 및 조절기능을 강화한다.

(5) 예산 점증의 관행 방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점증의 관행을 막고 각 부처의 의견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킨다.

(6) 기 타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확보의 유인이 저하될 것이다.

II. 한 계

(1)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일 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처별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집행상의 점검이나 통제가 불필요해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산편성상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배정과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사업별 자원배분의 부처 자율은 예산통제의 어려움을 수반한다.

(3) 각 부처의 이기적 · 방어적 정보제공이 국무회의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4)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최초 총액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배분결정이 정치적 타협에 치우쳐 정책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

(5) 개별 부처에서는 신규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때 현실적인 애로를 겪기도 한다. 이는 한도액이 현재기준으로 배정되어 기존사업들이 자원배분에서 기득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업 혹은 부처별 총액을 배정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상황을 균형이라고 전제하고 총액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

(6) 부처의 지출한도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선심성 예산편성의 징후도 나타나며, 책임을 뒤로 미루는 예산(deferred budgeting)도 등장할 우려가 있다(배득중).

(7)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해야 할 일을 각 부처가 기피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거나 하기 힘든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거나 회피해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2021 비전행정학 p.991